

과다 수주에 인력·장비 부족 '태반'

# 환경측정대행사 80% 역량 '미흡'

환경부, 152곳 이행 능력평가 대기분야 87곳, 수질분야 65곳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 발견 내년 법령 개정... 평가 의무화

환경부, 152곳 이행 능력평가 대기분야 87곳, 수질분야 65곳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 발견 내년 법령 개정... 평가 의무화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0곳 중 8곳은 저가나 과다 수주, 인원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고, 저가 및 과다 수주로 부실 측정 문제가 불거

져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평가 결과 117개(77%) 업체가 중위 등급(C~D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 가능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 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개 업체는 하위등급(E등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보유 시설·장비 상태가 미흡했고, 직원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는 33곳(21.7%)에 불과했다.

이정미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중위 등급을 받은 업체가 77%로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해 전반적인 측정 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위법 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 수

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포상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측정대행업체들이 평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업체들의 평가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하면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더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韓-美,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공조'

한미 상무장관 회담서 합의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8일 국장급 대화채널을 첫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9~11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9일 미국 상무부에서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후속 협력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오는 12월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또 동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해 문 장관은 "상무부 협조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레이몬드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어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아울러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고객 돈 23억 '꿀깍'... 한강라이프 檢 고발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등 고발 30억8600만원 지연 지급 하기도

대전 소재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주)가 50억원대의 고객 돈을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21년 3월 5일~7월 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표이사가 올해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한 6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 신고를 했다.

한강라이프가 올해 초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폭증한 이유는 전 대표 시절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

려졌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즉시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이어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송영무 전 국방장관, 경항모 예산 해명

기고문 통해 우려 진화 나서 "항공모함 건조해도 군예산 안 줄어"

막대한 국방 예산이 투입될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시화되면서, 경항공모함 도입에 해군의 '국방비 독식'과 '경제적 효용성' 등의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전 장관은 지난 9일 해군 창설 76주년 기념 국방일보 기고문을 통해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그렇지만 충분한 공감을 받기에는 부족한 평이다.

송 전 장관은 기고문에 "과도한 예산이 해군에 집중돼 육군이나 공군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기우"라며 "해군 예산만으로도 건조비를 10여년 넘게 나눠 투입하면 충분하기에 육·공군 예산은 절대 축소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전투



해군이 창설 7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최초로 공개한 경항공모함 컴퓨터 그래픽 영상. /해군

함·잠수함·항공기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해군은 1990년도부터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전투함·항공기·잠수함 사업을 지속해 왔기에 추가 전력 소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 착수 예산으로 72억원을 요청했고, 국회가 동의하면 내년 중 사업자를 선정해 기본설계에 착수에 들어간다. 언론도 경항공모함 도입 찬성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경항공모함 도입은 장밋빛이 아니다.

해군 예산만으로 한 척당 2조원 이상이 되는 경항공모함 건조비를 10여년간 나누어 투입한다해도, 심각한 병력 부족과 소화기를 비롯한 장비 정비에 애를 먹고 있는 해군이 예산을 긴급히 써야 할 부분은 많다. 이미 지난해 7월 해군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해상 38시간·육상 20시간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언론은 3만톤급의 경항공모함이 아닌 4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수출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한국형 항공모함 구매에 상 국가들도 거론된 국가들을 세심히 들여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은 지난 7일 '한국형 항모 수출' 얼마나 가능성 있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형 항공모함 수출이 쉽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수소전기차 살펴보는 관람객들

10일 울산전지컨벤션센터(UECO)에서 2021 울산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관람객들이 수소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국표원, 17건 수출애로 해소 팔 걷어

제3차 WTO TBT 위원회 참가  
인쇄철강제품 강제 인증 등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 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할 때 활용된다.

이번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은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유럽연합(EU)의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프랑스의 순환경제법(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세알로일 금지),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 규제 등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와 터키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